

전남의 어제와 오늘을 토대로 ‘미래’ 그린다



광남초대석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의 일관성과 부단한 노력의 결과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전남도, 국토 서남권 나아가 글로벌 성장엔진으로 도약하고 있는 전남의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도정의 회의실, 현장의 목소리, 이를 토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이 함께 아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전남 연구원은 바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전남도 유일의 출연연구원이다. 전남도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 정책을 연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도정이 나아갈 길을 뒷받침하는 정책 파트너다.

독립 출범이라는 전환점을 맞았던 전남연구원은 다시 한번 도약의 분기점에 섰고, 그 중심에 김영선

의 전남 유치에 따른 맞춤형 연구자원을 위해 ‘기후AI·에너지연구실’을 신설해 미래 전남을 위한 도정 지원체계를 적시에 마련했다.

그는 “정책과 기술환경 변화 속도에 비하면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며 선제적 이슈 발굴과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래 대응을 강조해 왔다. 근시안적 성과보다 중장기전략, 선언보다 실행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는 연구원의 운영 기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금은 행정통합이란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연구원이 마련했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초안은 제22대 국회 전남지역 국회의원 공동 1호 법안 발의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연구원

‘설계부터 실행까지’ 지원...전남도정 전략 파트너 도약
AI·에너지 중심 성장전략, 지역 자원·잠재력 등과 연결
현장서 답 찾고 데이터로 검증...정책 플랫폼 자리매김

전남연구원장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40여년간 연구와 정책 기획을 이끌어온 그는 전남연구원을 도정의 전략 파트너이자 지역발전 설계자로 재정의한다. 특히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형 연구사업과 정책 기획을 진행해 왔던 그는 “이제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역’, 그중에서도 제 뿌리인 전남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남을 대표하는 정책 개발의 중심점으로 연구원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실 김 원장의 취임은 전남연구원 인력에서 적잖은 주목을 받았다. 기존 원장 인선과 달리, 공학·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연구원의 색깔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취임 직후부터 ‘혁신·도약·소통·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 가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된 전남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의 잠재력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천형 두뇌집단으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전남의 길은 전남이 설계해야 한다

김영선 원장은 전남연구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연구원은 단순히 자료나 정보를 분석해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현안에 대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소멸, 인구감소,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연구원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반영하듯 그는 취임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인구전략, 기본소득, 재난안전AI융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화센터를 설치했고, 최근에는 ‘경전동지(驚天動地)’로 일컫는 ‘오픈AI전용 데이터센터’, ‘국가AI컴퓨팅센터’,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지역 현안 해법,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에서 출발
그리 길지 않았던 재임 기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 현안이 무수했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전남 국립의대 유치 등 민감하고 복잡한 현안에서도 김 원장은 연구원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 국민주권장부가 두 팔 걷고 나선 공항 이전 문제는 연구원이 주도한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 내 여론 지형을 변화시키는 한편, 나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이와 연계한 서남권 미래전략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에서도 김 원장은 단순한 대학 유치를 넘어 전남 전역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와 지역에 소재한 의생명산업 기조 인프라를 연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조화로운 지역 성장을 위해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필수 의료체계 완성에 초점을 두고 도정 지원을 지속해 왔다.

이뿐만 아니라 시·군별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군 담당연구원제도 또한 지역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인구감소지역 대상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담당연구원이 참여한 투자계획서 작성부터 발표에 이르는 서면·현장 컨설팅을 통해 광역시·도 유일의 2개 지역이 우수자치체로 선정되는 등 전남도의 4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쾌거를 이루는데도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전남연구원이 단순한 정책 자문기관이 아닌 도정 지원의 중심점이자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정책 동반자, 나아가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한 ‘전남 시·군 핵심정책비전 투어’는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24년 화순을 시작으로 2025년 말 전도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을 통해 전남 각 시·군이 지닌 잠재력과 한계를 짚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 비전과 성장전략이 제안됐다.

이번 비전 투어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지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을 필두로 농수축산, 문화·관광, 광주·여건, 교통인프라 등 지역별 강점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 비전을 설정했다. 에너지와 AI, 데이터 산업의 결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미래 산업 중심 전략을, 농어촌 지역에는 고부가가치 농수축산 식품산업과 생활 기반 확충 전략을 제시하는 식이다.

김 원장은 “지역발전은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사업 아이디어는 전남도의 핵심 과제에도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단순히 요청받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이기보다는 먼저 지역의 문제를 제기하고 최적·최선의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 동반자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AI·에너지, 전남의 미래를 준비하다

오랜 시간 과학기술계에 몸담았던 김영선 원장이 바라보는 전남의 미래는 글로벌 기술·시장 트렌드와 전남도정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이제 전남의 경쟁력은 에너지와 AI가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 원장은 과학기술을 특정 분야의 전문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 수단으로 바라본다. 전남이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과 AI 데이터센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등 굵직한 사업들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과학기술이 정책과 결합될 때 전남의 성장전략은 지속가능성을 갖게 되며, 전남연구원은 그 과정에서 도정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신도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등 그의 시선은 하나같이 전남의 비교우위 잠재력과 국가 전략의 접점에 맞춰져 있다. 그는 전남을 단순한 에너지 공급지가 아니라, 연구·실증·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에너지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로 규정한다. 최근 나주 유치가 확정된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비롯해 AI 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 역시 각각 따로 존재하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중장기 미래 전략 속에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I에 대한 그의 시선은 분명하다. AI는 특정 산업이나 기술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다. AI 고속도로 구축, 데이터 인프라 확충, 전문인재 양성이 전남의 산업·농수축산·에너지 정책과 결합될 때,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원장이 그리는 전남의 미래는 과학기술을 매개로 정책과 산업, 지역의 가능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남연구원이 그 구상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직이 바뀌어야 정책도 바뀐다

“연구원의 핵심 동력은 결국 사람입니다.”

김영선 원장이 취임 이후 반복해 온 이 말에는 전남연구원을 바라보는 그의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독립 출범 이후 연구인력 감소와 조직 안정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한 연구원이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단계적인 인적자원 확충과 함께,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교육훈련 강화와 성과 기반 보상체계 도입, 디지털 업무시스템 고도화는 그 출발점이다. 여기에 더해 김 원장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정책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연구원의 물리적·제도적 인프라 역시 그 위상에 걸맞게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독립 연구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언급 역시,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곧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 원장이 스스로를 ‘계약직’이라고 표현하는 지점이다. 연구원의 미래는 특정 개인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 가야 하며,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협력적 경쟁 (Co-opetition)’ 속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될 때 조직의 실행력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운영 철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구과정 전반에 걸친 끊임없는 내부 토론과 문제 제기는 그가 지향하는 조직문화의 핵심이다.

△전남의 내일을 묻고, 답을 준비하다

김영선 원장은 전남연구원을 단순한 정책 자문기관이 아니라, 도정 지원의 중심점이자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정책 동반자, 나아가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구상을 거듭 강조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며, 도정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으로 정책을 완성하는 연구, 그것이 그가 그리는 전남연구원의 모습이자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김영선 원장은 “전남의 미래는 누군가 대신 설계해 주지 않는다. 전남의 여건과 잠재력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열린 한·중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스페이 중 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연구원 회의실에서 전 직원과 함께 ‘고향사랑 캠페인 실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